

## 정부 공모 사업 '국가균형발전' 항목 의무 적용해야

전남도, 산업 인프라 완비 수도권·충청권에 밀려... 법령 개정 촉구  
"수준 높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으로 자체 경쟁력 높여야" 목소리도

전남도가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 집적도, 산업 인프라 등이 완비된 수도권, 충청권 등과 참여 한 정부 공모사업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근본적인 공모 기준 변경 없이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수준 높은 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공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전남도가 에너지산업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산업 혁신 기반과 연계해 전남에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기획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다. 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시험평가 기관인 한국전지기술연구원이 총괄 기관으로, 국내 전지 3대 제조사 모두 '수요기업'과 '결과활용 동의기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한 전남도를 제치고 기존 이차전지 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는 충북도가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이어 또다시 충북도에 뒤져 중요 연구개발시설을 놓친 셈이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국가균형발전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 집적도, 산업 인프라 등으로만 평가한다면 정부 공모사업 대부분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요기업, 기존에 구축된 설비·장비와의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88.7%,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의 경우 수도권 33.8%, 충청권 36.4%, 영남권 18.5%, 호남권은 7.4%였으며, 연구시설장비 예산은 수도권 19.2%, 충청권 27.9%, 영남권 35.7%, 호남권 14.4% 등이다.

국가 R&D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비의 지역 간 편중은 지역 간 미래성장동력 격차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국가 R&D 및 연구개발시설장비 공모사업의 중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산업기술혁신법 추진법 시행령'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시설 등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도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 개선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인프라 지원 우대 등 내용이 포함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국이 3시간 생활권임에도 국가 R&D 사업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해 있다"며 "지역 간 균형있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달성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벌써 초여름 날씨 ... 죽녹원 대나무 숲을 걸어요



광주와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오르내리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5일, 담양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거진 대나무 숲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확산 심상찮다

5개 자치구 곳곳서 확진자 발생  
유흥시설 영업제한 방역수칙 강화

광주시가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을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 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시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감염특징은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 간 밀접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과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 중복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가 감염된 사람이 많다"면서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

화하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생활 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같은 시각 식당과 카페 등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초청행사는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선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2375명을 기록했다. 전남에선 금요일인 지난 23일부터 휴일인 25일까지 사흘간 총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1039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등 5개 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전남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한일해협 연안 5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지난 22일 부산시청에서 열어 결정 철회와 해양환경 보호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5개 시·도 담당과장이 참석

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시·도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 대응 방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들 시·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체로서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은 물론,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깊게 우려해,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강성운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일해협 연안 시·도와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www.krb.co.kr

23년 연속 (1999 ~ 2021)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1위

www.krb.co.kr

69 창간 69주년 광주일보

보일러 기술 50년  
귀뚜라미보일러!

#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역시 귀뚜라미

콘덴싱 보일러 선택이 고민 되신다면  
귀뚜라미 친환경 고급형 보일러~  
거꾸로 콘덴싱 프리미엄 보일러

제품 문의 : 1588-9000

**Kiturami**